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 이슈와 포럼** 통권 제 2호 / **발행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하혜수 / **편집위원장** 서정섭  
**위원** 김성주 박진경 손화정 송지영 윤태섭 윤영근 주재복 최인수 / **담당부서** 교육홍보과  
**연락처** T 02-3488-7361 F 02-3488-7305 / **홈페이지** [www.krila.re.kr](http://www.krila.re.kr) / **디자인** (주)대유기획인쇄

- 본 지방자치 이슈와 포럼은 매월 말 발간됩니다. 정기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성함, 연락처, 주소, 이메일 주소를 기입하여 메일 주소로 신청하여 주십시오.(무료) [newsletter@krila.re.kr](mailto:newsletter@krila.re.kr)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지방자치 이슈와 포럼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www.krila.re.kr](http://www.krila.re.kr)



# ◎ Part1. 지방자치실천포럼

- 대한민국의 미래와 경기도정



「지방자치실천포럼(공동대표: 이달곤 교수, 하혜수 원장)」은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지방자치발전에 대한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는 협업의 장으로, 격월 1회 정기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23회 지방자치실천포럼  
발제 및 토론 요약

## 대한민국의 미래와 경기도정 - 남경필 경기도지사

### 1. 발제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참석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요즘 경기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대단하신 리더분들이 많으신데요. 최근 제가 리더의 역할을 생각해보다가 배의 선장님께 여쭙어보게 되었습니다. 선장의 기본적인 역할은 망망대해에서 손에 있는 나침반을 통해 내 위치가 정확하게 어딘지 아는 것이 첫 번째 기본 덕목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내 위치를 알아야 지금 가고 있는 것이 늦은 것인지, 암초가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은 아닌지 등 이런 것을 모두 알 수 있게 되고, 내 위치가 어디인지 정확히 알아야 준비도 하고 방향도 정하고 선원들에게 상황을 설명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내가 갈 길, 내가 가고 있는 길은 내 위치, 방향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 것인지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는 민주주의의 근본이라는 것이 인간이 스스로 불완전하다고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혼자서는 힘들지만 두 명 이상이 모여 함께 이야기를 하고 여러 사람이 토론을 하면 더 정의에 가까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틀리다고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민주주의의 제도가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성장, 양극화, 청년실업, 저출산과 고령화의 문제 등의 여러 가지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문제이기도 하고 이게 구조적인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현재 도태로 갈 것인지 생존으로 갈 것인지 중요한 기로에 서있는데요. 2만 불의 함정에 빠져있는 상황인데 2만 불에 진입하지 못하고 쇠퇴한 국가도 워낙 많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일본과 싱가포르 정도만 성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인지 고민을 누구나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아까 이달곤 대표님께서 제가 국가모델에 대해서 공부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가 최근에 관심을 갖는 나라는 독일입니다. 통일 관련해서 독일 공부를 시작했는데 모두들 아시겠지만 통일은 아시다시피 그 결과이고 통일이라는 결과를 가능하게 한 저력이 있었습니다. 즉, 독일의 통일과 현재의 번영을 가능하게 한 것은 정치와 경제였습니다. 독일이라는 나라가 바이마르공화국에서 혼란시기도 겪었고 히틀러의 파시즘을 겪으며 전 세계에서 전쟁, 유태인 학살과 같은 일을 벌이며 온탕과 냉탕을 드라마틱하게 겪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독일의 정치인들, 학자들, 목사님, 사회운동가들이 모여 목숨을 걸고 토론과 고민을 거듭하며 질서자유주의라는 철학을 만들어 냅니다.



이러한 질서자유주의의 두 개의 축이 정치와 경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치는 바로 연정(聯政, Political Alliance or Coalition)을 하지 않으면 집권이 불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은 독일의 BMW 같은 정교한 정치제도 도입니다.

늘 협력하도록 만들어 놓은 정치제도, 그렇지만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같은 시기에 새로운 공화국이 출발했던 일본과 독일을 비교해보면, 독일은 70년 동안 8명의 총리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메르켈 총리 역시, 10년 정도 집권하고 있지요. 반면 일본은 제가 그 시기동안 64명까지 세다가 포기했습니다. 이것은 독일이 잘 돌아가는 기계처럼 짜놓은 정치제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경제제도입니다. 독일인들은 시장을 믿지만, 시장의 활동이 실패할 수도 있음을 자각하고 거기에 사회적 가치를 포함한 사회적 시장 경제 체제를 접목시켜놓았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마에스트로 등의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는 일에 정말 많은 노력을 쏟아서 거대한 소수 대기업이 아닌 오랫동안 축적되어온 사회적 자본이 모여서 제조업과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갖추게 된 놀라운 성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덕분에 성장과 복지라는 두 가지 패러다임을 실현시키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건국 이후, 미국적인 정치, 경제체제를 받아들이면서 무척이나 자랑스러운 발전성과를 이루어냈지만, 냉정히 우리의 위치가 어디인지 자각하고 새로운 극복방안을 필요로 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 독일의 예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100달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100달러인데 원가는 7센트라고 합니다. 12만 원짜리를 7센트의 원가비용을 들어서 만들어 내는 것이지요. 그

리고 광고도 안 하지만 전 세계의 모든 나라가 이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심지어 멕시코 마약상도 이것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이러한 상품이 세상에 또 있을까요? 더욱더 놀라운 것은 미국의 페더럴 리저브 뱅크(The Federal Reserve Bank of Dallas)가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어마어마한 쌍둥이적자를 가지고도 파산을 안 하는 이유가 이것이지요.

우리의 목표 역시 이와 관련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선진국 문턱에서 엄밀히 이야기하면 고전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스탠더드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진짜 선진국이고 독일 역시 이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자들이 대한민국의 글로벌 스탠더드를 만들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폰’의 경우, 중국에서 제조한다고 해도 ‘애플’이라는 사업의 새로운 이익을 창출해내면서 새로운 스탠더드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럼, 정치와 경제 분야에 있어서 독일 이야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죠. 위 사진을 보시면 작년에 찍힌 것인데 메르켈 총리와 슈뢰더 수상총리가 비록 정적 관계이지만, 기민당의 우파 연정으로 집권하신 분과 시민당의 좌파 연정으로 집권하신 두 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리의 출판기념회에 메르켈 총리가 참석하여 축하하는 장면입니다. 2000년도 초반에 독일이 통일 후 비용도 많이 들었고 노조의 힘이 강해지면서 상황이 안 좋



아지자 좌파 연정으로 집권하였던 슈뢰더 총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배의 선장처럼 현재의 위치에 대하여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젠다 2020’이라는 개혁을 추진하며 ‘페터 하르츠’라는 폭스바겐의 CEO 출신이 개혁을 선도하게 됩니다. 이 개혁에서 노동 유연성, 연금 개혁을 주장하게 되자 독일 사회에서는 한바탕 난리가 났었습니다. 총리를 집권하도록 해준 노조의 이익을 정반대로 거스르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2005년 총선에서 결국 좌파 총리는 졌고 메르켈 정권이 등장하게 되지요. 하지만 메르켈 총리는 이 ‘하르츠 개혁’을 그대로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독일이 겪고 있는 번영과 안정은 메르켈 총리가 잘 해서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슈뢰더 전 총리가 권력과 집권기반을 포기하면서까지 개혁을 통해 독일의 안정을 우선시하겠다고 했던 의지가 있었음을 현재 독일 국민들도 인정하고 있는 바입니다. 독일방문 기간 동안 제가 슈뢰더 전 총리를 면담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만남에서 가평 잣을 선물했더니 다음날 현지 외무부 장관을 만나보라고 연락이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현지 외무부 장관을 면담할 기회가 생겼는데요. 이런 일들이 가능한 것이 독일의 장관 18자리 중에 현재 슈뢰더 전 총리의 정파가 임명을 했기 때문입니다. 외교부장관까지도 야당이 지명하고 여야가 힘을 합쳐서 정치를 이끌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정치상황을 우리나라에 대입해볼까요?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되는 정파와 그렇지 않은 정파 간 차이가 너무 큽니다. 그러다 보니 물이 없이 일단 이기는 것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물의 틀 안에서 신사답게 행동하고 미래를 위해서 개혁하라는 것 자체가 힘든 상황이지요. 우리가 뽑은 정치 지도자들이 제가 아까 말했던 멋진 정치인들에 비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한 표라도 이기면 모든 권력을 가지는 틀 안에서 나이스하게 행동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5번 국회에 있는 동안에 공천과정을 보았는데 현역 교체율이 5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현역 교체율이 50%인 국가는 없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90% 정도가 재선하는 상황입니다. 물갈이가 정치개혁이면 대한민국 국회는 아주 좋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지만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제도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양쪽이 손을 잡을 수 있는 제도, 타협이 가능한 제도, 위너와 루저가 별 차이가 없는 제도, 표결로 60:40으로

이겼으면 권력도 나눌 수 있는 제도, 이러한 제도가 가능하다면 나라와 미래를 위해서 개혁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지요. 독일은 그래서 늘 연정을 합니다. 아테나워 수상 때 단 한번 과반수 득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들의 기대를 깨고 아테나워 수상은 연정을 스스로 자처하며 이어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안에서 반대 목소리가 없는 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다며 소신 있게 발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경기도도 연정을 하고 있습니다. 법에 의한 연정이 아닌 정치에 의한 연정입니다. 저는 새누리당이지만 부지사는 더민주당에서 추천한 인사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역시 30% 정도의 인사권을 서로 추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리고 20개 항으로 구성된 연정합의서를 썼습니다. 거기는 경기도 지사와 경기도 부지사의 공약이 모두 다 담겨 있어서 예산에 자동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연정합의서에 명시된 것은 예산 역시 자동적으로 배정되고 있습니다. 지난 누리과정 관련하여 충돌이 일어났던 적이 있었는데 이는 연정합의서에 있었던 내용이 아니었으며 이를 통해서 제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연정을 잘 하려면 합의서를 더 촘촘하고 탄탄하게 작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의회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예결위가 상임위가 아닌 특별위입니다. 국회가 먼저 생긴 이유가 국민들의 세금을 어떻게 쓸 것이냐에 대한 감시를 하는 기구인데 대한민국 의회는 예산 편성의 권한과 감사 역시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먼저 예결위를 상임위로 만들어서 연중무휴 일을 하도록 제가 요청해서 현재 논의 중에 있으며 의회의 권한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대한민국 안에서 여·야가 힘을 합쳤더니 장기적인 일들이 가능해지는구나!’라고 느낄 수 있도록 경기도가 글로벌 스탠더드를 만들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이것은 미국식도 아닌 독일식도 아닌 제도이며 개발도상국들이 성장하기 위해 빠른 의사결정과 안정적인 정치구조를 원하는 제도 하에서는 대한민국처럼 해보자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힘이 한류와 같은 콘텐츠 파워가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하드파워가 아닌 소프트파워로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스탠더드가 우리의 소프트 파워가 통하는 곳에서는 새로운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경기도에서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에서 91년도 선거에서 클린턴 대통령이 “STUPID! IT’S ECONOMY”라고 했

던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한 가지 문제를 고쳐야 한다면 저는 정치시스템을 고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승자독식, 끝없는 정쟁만 있는 이런 제도를 고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경제입니다. 대기업 위주의 성장 패러다임으로 눈부신 발전을 했지만 현재는 이런 상태로 지속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뛰어넘는 새로운 경제시스템이 필요할 텐데요. 저는 이제는 공유적 가치가 시장경제와 접목되는 그런 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글로벌 혁신회사, 구글,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을 보시면 새로운 기술혁신에 따라서 변해가는 경제 환경을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랫폼을 깔아놓고 플레이어들이 와서 놀도록 하고 그 가운데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오픈 플랫폼 형식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대적 환경과 맞는 경제 패러다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공유적 시장가치의 실현입니다.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땅, 예산, 공무원 인력이라는 세 가지를 잘 묶는다면 경기도가 오픈 플랫폼을 깔아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경기도가 주식회사를 출범시킵니다. 공유적 시장경제의 모델로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스타트하려는 사람들, 즉 대기업 위주의 경제구조 속의 약자들을 위한 플랫폼을 깔아주면 그게 바로 경제민주화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키를 낮추는 것이 아닌 키높이구두를 신겨주는 원리입니다.

이것을 경기도가 가진 땅, 인력, 자본을 이용하여 대기업에는 없는데 중소기업에는 없는 브랜드, 물류단지과 같은 것을 지원해주려고 합니다. 더 구체적인 예를 들면 경

기도가 CJ와 계약을 맺어서 군포의 물류단지를싼 가격에 쓰고 경기도의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브랜드가 없는 중소기업을 위해 경기도에서 마케팅을 할 수도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소비자가격적인 프링글스는 3,300원인 반면, 경기도 주식회사에 소속된 중소기업이 프링글스 제품 못지않은 맛있는 감자칩을 만들고 입점료, 마케팅비용, 유통비에 대한 부담 없이 원가와 이윤만 가격에 반영할 수 있다면 경기도 주식회사가 만든 감자칩은 980원에 판매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이마트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며 경기도의 중소기업을 모아 이마트의 ‘노브랜드’라는 브랜드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최고제품만 만든다면 경기도 주식회사에서 들어오는 순간 다른 마케팅과 모든 것들은 해 줄 테니 중소기업이 최고의 제품 품질에만 신경을 쓸 수 있도록 지원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제가 일본에서 가서 일본 리테일의 발전에 대해 배우고 왔는데 혹시 ‘쓰다야 책방’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요? 인류가 만들어낸 고유한 코어 상품들이 융합을 시작하면서 진화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1단계는 스타벅스를 예로 들 수 있는데 책을 보면서 커피를 머시는 곳으로 되었다가 이게 점점 발전해서 책과 관련된 모든 상품이 다 모여 있습니다. 이게 바로 융합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주식회사가 이런 방향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코어 아이템을 선정하여 성공시킨 후 연관된 모든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경기도 주식회사를 발족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에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일을 중앙정부에서 감시는 하되 무조건 막기보다도 평가 후 잘하고 있는 것은 좀 중앙정부에서도 지원하는 여건이 허락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하는 모델이 전 세계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글을 필두로 한 플랫폼 혁신 기업들이 세상을 평등하게 만들어져야 하는데 실제로는 오픈 플랫폼이 아닌 셀렉티드(Selected, 선별적인) 오픈 플랫폼인 것처럼 빅데이터를 독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우려를 없애기 위해서 정보의 독점을 막고 공공기관에서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이 오픈 플랫폼을 만들면 금수저, 흙수저 없이 오직 기술력과 서비스, 새로운 모델로 승부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덩치나 규모의 차이와는 상관없이 말입니다. 이러한 일들의 일환으로 경기도에서 판교 스타트업 캠퍼

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스타트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누구든지, 스타트업을 어떻게 시작하고 졸업할 것인지에 대해 다 다루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세계적 벤처 캐피탈도 있고 심지어 변호사들과 회계사들도 있어서 아무런 제약이 없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아이디어만 내면 되는 환경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실제로 구글의 경우 우리나라와는 달리, 인문학자를 많이 고용하고 있습니다. 즉, 기술자보다도 인간에 대한 고민과 이해를 비롯한 의문을 가지고 모델을 만들면서 이후 기술을 찾는 형식인겁니다. 그래서 경기도도 판은 깔아주고 생태계를 만드는 것은 인간들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공유적 시장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공한다면 내년에는 경기도 협동조합을 만들 것입니다. 공공영역이 플랫폼을 구축하고 정보를 독점하지 않고 공유하며 판을 깔아주는 것이지요. 전 세계에 이러한 움직임은 없었고 이는 새로운 글로벌 스탠더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판교의 스타트업 시티 역시 만들 계획이 있습니다.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된 모든 회사들이 판교에 들어와 테스트하고 놀아볼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금년 10월에 오픈할 예정이며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하여 각자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빠른 5G를 구축하는 통신, IoT(사물인터넷) 기반을 도로에도 깔고 물 세팅을 위해 진행할 것입니다. 첫 번째 물은 구글이 꿈꾸는 정도의 안전도가 완전히 확보되기 전까지는 자율주행자동차와 보행자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판교라는 도심 한 가운데 자율주행자동차들이 서로 교신하며 돌아다닐 것입니다. 그리고 돌발 상황 관리를 위해 로봇 역시 설치하여 자동차의 반응 정도를 살피며 이러한 연구 결과로 얻은 모든 데이터를 공유할 것입니다. 관련 기업들이 서로 집적하여 커다란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

할 것입니다. 공유적 시장가치의 틀 안에서 새로운 스탠더드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노력들이 전 세계의 스탠더드로 통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끝으로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는 정말 간단합니다. 제가 정치를 하는 동안 이러한 글로벌 스탠더드 딱 10가지를 구축할 수 있다면 제가 국가의 녹을 받은 것에 대한 보답을 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2. 토론



### 이달곤 지방자치실천포럼 대표

좋은 발제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실 행정이라는 것이 지사님 말씀 들어보니 플랫폼이 중요한데 관료주의가 너무나 깊게 있어 우리 사회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남경필 지사님의 발제 관련하여 귀한 시간을 내서 오신 만큼 자유롭게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유환 한국자치법학회 회장님

오늘 남경필 지사님 발제 잘 들었습니다. 적어도 20년 이상을 정치하셨는데 노련한 정치인보다도 참신한 정치인의 모습을 본 것 같아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공법 전공자로서 남경필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오픈 플랫폼 관련하여 국민 모두가 환영하고 찬성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식회사 구상과 관련해서 경기도라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의 공기업 활동에 돌입하게 된다는 말씀이신데 사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하게 된다면 우선 민간부분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지자체가 개입하게 되면 보충성의 원칙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장차 이것이 국가가 기업 활동을 하게 되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법적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계시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남지사님의 연정과 관련하여 굉장히 신선한 느낌인데요. 지방

자치법을 전공한 저의 입장에서는 경기도에서의 연정이라는 것은 부지사를 야당출신으로 하셨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부지사는 보조기관입니다. 그리고 보조기관은 원칙적으로 의사결정권이 없고 법적 위임이 이루어진 부분에서만 제한된 의사결정권을 수행하는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연정을 하게 되면 정책결정권의 대부분을 야당이 가져가게 되는데 이런 부분은 경기도의 연정과도는 전혀 다른 양상을 가져 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독일과 우리나라의 사정이 조금 다른 점도 고려해주시면 합니다. 독일은 오랜 법치주의, 규범문화가 있으며 연방정부 공무원의 90퍼센트 이상의 법학전공자, 변호사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집권당이나 야당 장관이나 여당 장관이 함부로 바꿀 수 없고 일정한 제도적 틀 안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독일보다는 약간 느슨한 부분이 많아 실제로 정책결정권자의 권한과 그 진폭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연정을 구상하실 때 조금 더 진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하여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달곤 지방자치실천포럼 대표

네. 감사합니다. 중요한 의견을 잘 들었고요.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한 분 더 질문하시고 답변을 함께 듣도록 하지요.





## 김성호 자치법연구원 부원장님

오늘 지사님 발제를 들으며 우리나라도 이제 희망이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김유환 교수님 의견에 이어 한마디 덧붙이고 싶습니다. 결국은 경기도 주식회사도 좋고 다른 사업도 좋지만 결국 경기도가 지금 인구도 많고 이미 거의 하나의 국가와 같은 역량을 가졌기 때문에 다양한 사업을 선제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른 시도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경기도가 민간 부문을 침해할 수 있는 영역, 공공부문이 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선다면 시장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 남 지사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사님들이 모이시면 가끔 지사가 중앙부처의 하청기관의 장이 아니라 창의적으로 도정에 맞게 실질적 시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를 봤습니다. 남 지사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경기도라는 천만의 수장으로서 독일 연방제 수준의 기능과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런 것들이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논의가 되지 않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지방이 국가 경쟁력을 이끌어 갈 수 있는지 혹시 남경필 지사님의 생각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남경필 경기도지사

두 분의 사려 깊은 의견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민간영역에 계신 분들과 이야기 하며 민간이 하는 일을 경기도가 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알파고의 혁신이 과연 일자리를

없앨 것이냐? 아니면 고용창출을 할 것이냐?’ 라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사실 어떤 길로 갈 것이냐는 인간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의 발전을 우리가 싫다고 해서 막을 수 없는 것처럼 말이지요. 그리고 지금과 같은 경제체제의 지속, 즉 대기업 위주의 경제구조에 대한 위험성은 다 이해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기도 주식회사는 철저하게 상법에 의한 회사로 판을 깔아주는 준비만 하고 있는 것이고 공공성과 효율성을 잘 배합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적해 주신 부분들을 배려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정과 관련하여 법에 의한 연정이 아닌 정치적 연정입니다. 분명 한계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과 같은 정치체제를 그래도 두자는 것인지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답이 아니라면 움직여야 하는데 독일제도가 아니고 독일과 같은 방향으로 권력을 분점 하는 식으로 가자고 시도를 하고 있는 중이며 비전의 제시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스템으로 움직이게 하려면 학자님들의 연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경기도 연정이 하나의 사례로 정치시스템 개편과 관련된 논의가 활성화되어 새로운 방향 역시 제시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와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 정부 간 협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정치시스템 개편과 관련하여 의회와 행정부 관계,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와 관계 등 헌법 연구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정치와 헌법 시스템으로는 북한의 정치와 체제를 끌어안을 수 있는 포용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통일까지 염두에 둔 정치체제와 헌법 관련 진지한 대화와 논의가 지금부터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지금 경기도가 하는 일들이 자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

경기도지사님이 열정적으로 하시는 것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열심히 도와드릴 생각이 있습니다. 다만, 현행법에서는 우리 교수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지난해 공기업 개혁의 핵심이 공공성과 시장성을 판단해서 시장성이 강한 것은 좀 이양을 하자고 하게 되었습니다. 또 기존에 공기업법과 출자출연법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공기업 형태로 할 것이냐 아니면 주식회사 형태냐 해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법에서는 출자 시 최소 10%의 지분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상법상 해산을 청구할 수 있는 최소요건이 10% 이상의 지분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것은 경기도 주식회사가 잘되면 모르는데 잘 안되었을 경우 세금이 그대로 없어지는 결과가 있을 수 있으니까 최소한 10% 지분을 통해 해산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것입니다. 25% 정도 출자를 했으면 평가를 하도록 해놓았습니다. 주식회사 형태로든지 설립은 가능한데 일정 지분이 있으면 그래도 공공성 측면에서 돌아보고 관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법을 열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주식회사는 관련법에 따라 협의해나가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이야기하신 교수님들 우려대로 공공부문이 시장의 범위를 어디까지 치고 들어갈 것이냐에 대하여 공공성과 시장성을 함께 고민해 나가면서 이것이 지속이 가능해야 한다는 큰 틀에서 고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김경희 대전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남경필 지사님 발제가 드라마 한편을 본 느낌이기도 하고 굉장히 젊은 지도자의 모습이 보이기도 하는데 사회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고민을 하시며 정치적 경륜이 묻어나는 자리인 것 같아 여기 오길 잘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기도 주식회사라는 부분을 통해서 그 안에 공공성과 효율성이란 가치를 함께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과 관련된 방향성은 그렇게 가는 것 같고 어찌 보면 가치와 철학은 공공성을 가지고 가지지만 결국 평가에 대한 부분은 성과위주로 갈 수 밖에 없는 부분이라 이율배반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어떻게 잘 구현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거버넌스의 측면에서 볼 때 공급자 중심의 거버넌스가 형성될 수 있고 경기도의 범위 안에 경기도민들, 소비자들이 그런 상품화된 부분을 선택할 것이냐의 모습이 극명하게 보일 텐데요. 한편으로는 우선 돌봄과 나눔, 공공성에 대한 부분, 즉, 교육이나 의료나 먹거리에 있어서 이미 협동조합운동이 진행되고 있고 아래로부터의 참여가 조직되지 않는다면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저도 지금 고민의 지점이 우리사회의 방향을 잘못 이끌어 가는데 있어 교육의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경기도의 실험이 교육이나 의료나 이런 부분에 있어 일반 시민들의 참여가 가능한 부분을 조직해나가면서 공공성의 부분도 발현해낼 수 있는 부분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 남윤호 중앙일보 뉴스룸 국장

개인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경기지사라고 하면 자치영역보다는 중앙 정치 쪽의 이미지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지사님께서 분권, 오픈 프라이머리, 개헌 등 많은 의견을 내시고 실천을 하시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새누리당에서는 채택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라고 하셨지만 지금하시는 공유경제가 2012년도 김종인 새누리당 비대위체제에서 주장한 경제민주 관련하여 뿌리를 두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지금 새누리당이 주장하고 있는 당의 정체성과는 어떤 정합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남경필 경기도지사

모든 정치인들의 꿈이 가장 큰 일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현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준비가 되었는지 생각해봐야 할 것 같고 저는 그런 가치를 만들어나가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실제로 하는 사업들에 대해 우려를 많이 해주시는데 무반응이 아닌 비판이 있기 때문에 해 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가 대한민국에 전해질 수 있다면 계속해서 이러한 변혁을 이끌어 나가고 싶은 생각입니다. 아주 작지만 그것이 세상의 체인지 메이커 역할을 한다면 그건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에서는 지사가 '시책추진금'이라는 것을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 지자체에 드릴 수가 있습

니다. 그래서 제가 지자체에서 가져온 사업 중에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오디션하여 총 400억 원의 상금을 매년 드리는데요. 경기도 주식회사 같은 경우도 사실 돈이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가 전체로 파급될 수 있는 기술의 변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의료, 교육 문제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관련하여 경기도의 영어마을을 베이스캠프로 교육부와 교사들이 모여 거꾸로 교실과 같은 사업을 운영하며 학교 교육의 현장이 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와 공동체의 결합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달곤 지방자치실천포럼 대표

오늘 지사님께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좋은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사실 경기도의 비중이나 중요성에 비해서 경기도가 언론에 대한 접촉은 없기도 하고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혹시 기회가 된다면 현장에 가서 좀 더 깊은 내용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발제해주신 지사님과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 ◎ Part2. 이달의 이슈와 포럼 : 지역협력

- 특별대담                      올림픽 명품도시로 도약하는 평창군: 심재국 평창군수
- 논단                              내부논단: 지역 간 연계협력 활성화 방안 - 지역행복생활권정책을 중심으로  
  
  외부논단: 지역행복생활권 구현을 위한 지방정부 간 연계협력 강화 방안
- 우수사례                      BY2C 외씨버선길 조성사업
- 지방자치단체탐방            구름도 쉬어가는 아시아의 알프스, HAPPY700 평창
- 이슈                              마을 속 골목경제 활성화사업 추진방안
- 연구원 동정





[심재국 평창군수]

## 올림픽 명품도시로 도약하는 평창군

일시 및 장소: 2016년 3월 25일 / 평창군수 집무실

인터뷰 대상: 심재국 평창군수

인터뷰 진행: 박승규 지역경제분석센터소장,  
수석연구원

**박승규 수석연구원**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및 장애인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에 대비한 평창군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심재국 평창군수** 개최도시 차원의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준비를 위한 대회준비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분야별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동계올림픽 개최 지역에 걸맞은 도시계획 재정비를 위한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변경하고 동계올림픽 특구지정, 산양삼특구지정, 국제회의도시 지정 등과 연계한 지역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동계올림픽 현안사업 추진관련 재정계획 수립을 위한 국·도비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평창동계올림픽 개·폐막식장을 포함하는 올림픽플라자 조성사업과 경기장, 선수촌, 접근도로 등 대회관련시설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인허가 처리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업들은 반드시 지역발전과 연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경기장과 관광지 동선을 연결하는 올림픽 경기장 주변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추진 중이며, 올림픽과 연계한 다양한 관광 인프라 확충과 문화올림픽 실현을 위한 사업도 추진 중입니다. 또한 손님맛이를 위한 올림픽 시민의식 함양과 음식·숙박 분야의 서비스 향상, 자원봉사 활성화에도 중점을 두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승규 수석연구원** 평창동계올림픽 및 장애인올림픽 개최를 위한 지금까지 준비된 사항들을 설명해 주신다면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심재국 평창군수** 지난 2011년 7월 6일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2018동계올림픽 개최도시로 “평창”이 결정된 이후 벌써 4년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2018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정부차원의 대회지원위원회, 국회차원의 동계올림픽특별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올림픽을 준비하고 추진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해 왔습니다.



올림픽을 준비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대회 시설입니다. 선수들이 각자의 기술과 기량을 겨룰 경기장 시설은 모두 12개소입니다. 신설되는 알펜시아 슬라이딩센터 등 6개 경기장은 이미 착공이 되어 최대 6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

고, 수도권지역의 관람객들을 1시간 이내 평창으로 수송하기 위한 핵심 기반시설인 원주~강릉 간 고속철도 공사가 현재 8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접근도로망 개설공사 부분에서도 국도 61%, 지방도 6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경기장 진입도로 16개 노선 중 9개 노선은 예정대로 진행 중이며, 추가 7개 노선은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내년부터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회 지원시설로 개·폐회식장이 포함된 올림픽플라자 조성사업은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며, 평창 선수촌(600세대) 조성사업은 지난 9월 착공하여 공사 중에 있고, 식수전용 저수지(11,000톤) 조성사업도 '14.12월에 착공하여 진행 중입니다. IBC 건립공사는 3월에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호스트 시티인 평창은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준비를 위해 조직위와 강원도와의 유기적인 업무협조와 지역차원에서 준비할 시민의식 개선, 도시환경 정비, 관광, 음식·숙박, 서비스, 자원봉사 등을 중점 준비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참여 열기를 재점화하고 성공개최 붐 조성을 위해 올림픽홍보관 건립과 각종 홍보조형물 설치, 2018평창동계올림픽 대중 건립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회가 끝난 이후에 남겨질 유산을 창출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평창올림픽 유산 기본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으며, 올림픽 브랜드를 이용하여 문화관광·농축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그것이 주민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승규 수석연구원** 어떠한 특성으로 인하여 평창이 동계올림픽 및 장애인올림픽 개최지가 되었습니까?(지역적 특성 등을 중심으로)

**심재국 평창군수** 평창군은 해발고도 700M 이상의 높은 산지가 전체면적의 83%이상 차지하는 지역 입니다. 그리하여 명실공히 대한민국의 산림수도라고 공표 하였습니다.

많은 눈과 차가운 공기, 산뜻하게 느껴지는 추위로 인해 평창군은 “하늘아래 첫 동네” “아시아의 알프스”라는 칭호를 받아 왔고, 대관령 눈꽃축제와 평창송어축제 등의 다양한 겨울축제가 끊이지 않는 곳이며, 겨울 스포츠의 대표라 할 수 있는 스키와 스노보드를 즐길 수 있는 리조트가 다른 어느 지역보다 많은 눈과 얼음의 고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조건으로 인해 동계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전 세계로부터 인정받은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한민국 국민의 91%, 강원 도민들의 93%가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지지해 준 점이 무엇보다 큰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박승규 수석연구원**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및 장애인올림픽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변한 점은 무엇입니까? (예: 지가, 환경, 인프라 건설 등)

**심재국 평창군수** 2012.1.26일 2018평창동계올림픽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공포되었고 2012.8.22일에는 시행령이 마련되어 대회지원을 위한 인프라가 추진되기 시작했습니다.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가장 먼저 변화를 가져온 것은 원주~강릉 간 복선 철도 건설입니다. 총연장 122km, 설계속도 250km/h의 원주~강릉 간 철도는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것이 올림픽을 통해 해결된 것입니다. 여기에 경기장 접근도로망으로 국도, 지방도에 대한 확장공사와 경기장 진입도로가 신설되면서 도로망에 대한 일대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계올림픽대회의 성공과 대회 이후 유산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7개의 특구가 지정되었으며, 특구를 중심으로 문화관광, 환경, 도시경관 개선, 스포츠 관련 사업들이 공공과 민간부문에서 투자되고 있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도암중학교 이전 문제도 중앙정부와 강원도의 지원

으로 올림픽플라자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식수전용 저수지의 건설과 하수도시설의 확충과 같은 대형 사업들이 추진되는 등 평창은 아시아 동계스포츠 중심 도시라는 비전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박승규 수석연구원**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및 장애인올림픽 준비를 하면서 3개 지자체의 연계협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심재국 평창군수**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정부와 지자체, 조직위 간의 협력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이러한 기관 간의 원활한 업무협의를 위해 강원도가 중심이 되어 정기적인 지역실무협의회와 개최도시 통합회의를 개최하여 주요 현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평창군과 강릉시, 정선군의 3개 개최도시는 베뉴시티협의회를 구성하여 연계협력이 필요한 현안에 대해서 상호 협조하고 있습니다.

개최도시 간의 연계협력 사업으로 현재 동계올림픽 붐 조성과 국제 스포츠대회 유치 등에 상호 협력하고 있으며,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는 존치되는 경기장을 중심으로 체험·교육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나아가 개최도시를 연계한 관광 프로그램과 동계종목 체험 루트 운영 등은 동계올림픽 유산을 함께 공유하는 차원에서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박승규 수석연구원**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및 장애인올림픽 개최 이후의 시설 관리계획 등은 무엇이 있습니까?

**심재국 평창군수** 경기장 및 등 올림픽시설 사후활용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한 준비를 위해 사후활용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사후활용 계획은 우선 관리·운영 주체가 결정되어야 하는데 현재 개·폐회식장 및 경기장 8개소는 관리주체가 결정되었고, 나머지 경기장 4개소에 대해서는 사후활용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강원도 자료에 따른 경기장별 활용방안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평창군에 위치한 경기장인 알펜시아 슬라이딩센터는 한국체육대학교에서 교육시설 및 훈련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개·폐회식장은 강원도가 관리주체가 되어 올림픽 역사 기념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릉시에 위치한 관동하키센터는 가톨릭 관동대학교에서 교육 및 시민체육시설로 활용하고, 쇼트트랙 보조 경기장은 영동대학교가 관리 주체가 되어 교육 및 시민체육시설로 활용하며, 강릉 컬링센터 및 강릉 아이스아레나 경기장은 강릉시가 관리를 맡아 시민 종합체육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 밖에 정선 알파인 경기장, 강릉 스피드 스케이팅, 강릉 하키센터 경기장은 관리주체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국·내외 선수 훈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 및 민자 유치 방안 등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후활용 계획들이 원만하게 잘 진행되어 올림픽 유산 창출과 지역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복합 문화체육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박승규 수석연구원** (KOC)한국조직위원회 및 IOC에 대한 당부 말씀이 있습니까?

**심재국 평창군수** 이제 평창올림픽 개막까지 690여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평창동계



올림픽은 전 국민적 지지와 응원 속에서 세 번의 도전 끝에 이루어 낸 값진 성과입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단지 대회 성공 개최에 중점을 두고 추진 할 것이 아니라, 동계올림픽 개최를 통해 개최지 지역이 한 단계 발전하고, 또한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동계올림픽은 세계인에게 감동을 주는 성공적인 대회 개최로 국가위상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어야 함은 물론 개최도시인 평창군이 올림픽 명품도시로 우뚝 설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합니다.

IOC에서는 평창에 앞서 성공적으로 대회를 개최한 도시의 노하우와 많은 조언을, 중앙정부와 조직위 등 관계기관에서는 동계올림픽 유산을 지역에 남기고 국가경제에 이바지한다는 차원에서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신 한번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박승규 수석연구원** 끝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및 장애인올림픽 영향 연구(2차)를 KOC의 의뢰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심재국 평창군수** “하루가 다르게 세계가 급변하고 있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올림픽을 개최하는 도시의 수장으로서 더욱 마음을 다지게 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변화의 물결을 거슬릴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

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연구와 정책개발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게 다양한 정보 제공을 지원함으로써 더욱 내실 있고 발전적인 지방자치단체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및 장애인올림픽 영향 연구(2차) 역시 평창군의 발전과 앞으로 나아갈 지표가 되어주는 훌륭한 연구 결과나 나오길 기대하며, 앞으로의 많은 발전을 기원합니다.





이소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발전연구실장

## 지역 간 연계협력 활성화 방안 지역행복생활권정책을 중심으로

### 1. 지역행복생활권 정책 및 현황

박근혜 정부들어 핵심 지역발전정책으로서, 주민의 일상 생활권을 대상으로 주민체감형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지역이 주도하고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한 효율성 및 상생발전을 추구하는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을 도입하였다. 여러 지자체를 하나의 권역으로 구성, 권역 내 지자체와 공공기관, 기업, 그리고 주민들이 연계협력을 통하여 공동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모색하며,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 복지, 주거, 환경, 일자리 창출 등 구체적인 사업을 실현하는데 노력해오고 있다.

이를 위하여 63개 생활권을 구성하고 생활권별로 주민행복 증진에 필요한 분야의 협력사업을 공동으로 발굴하여 생활권 내 주민들이 생활서비스 등의 수요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시군 간 연계협력의 전략 계획인 생활권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시군 간 칸막이를 넘는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지역발전위원회는 연계협력사업을 신설하여 상향식으로 공모·선정하는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lt;생활권별 발전계획 수립현황&gt;

구분	생활권명	생활권수	계획수립 생활권수*
서울	서경	1	-
부산	부산권	1	1
대구	대구권	1	1
인천	인천	1	1
광주	빛고을권	1	1
대전	대전권	1	1
울산	울산권	1	1
세종	세종공주권	1	1
경기	경원축권, 평안권, 경기 동북부권, 오산화성권, 한탄강권, 평화도시, 생명안전도시, 군포의왕, 안양과천, 경기 동남부, 수원용인	11	-
강원	춘천권, 치악산권, 백두대간권, 동계올림픽권, 영북권, 양구인제권	6	6
충북	청주권, 충주권, 제천단양권, 보은옥천영동권, 진천음성괴산증평권	5	5
충남	천안아산권, 홍성예산권, 서산당진태안권, 공주부여청양권, 논산계룡금산권, 보령서천권	6	6
전북	전북권, 서남부권, 동남부권, 동북부권	4	4
전남	서남부권, 동부권, 중부권, 중남부권, 서북부권, 구곡담권	6	6
경북	포항권, 구미권, 안동권, 영주봉화권, 상주문경예천권, 경산영천청도권, 의성군위권, 고령성주권, 영덕영양울진권, 삼도봉권, 소백산권	11	11
경남	동부권, 서부권, 동남부권, 동북부권, 서북부권	5	4
제주	제주권	1	1
총		63	50

자료: 지역발전위원회(2015a), 지역행복생활권 발전계획 효율화 방안

주\*: 2015년 11월 현재 수립중인 권역 2개소 포함

총 63개 생활권 중 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11월 현재 미수립된 권역은 서울, 경기권 생활권을 포함한 생활권 13개소이며,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총 139건의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2. 지역행복생활권 정책 및 현황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의 실행력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재 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지역행복생활권 구성의 경직성

지역행복생활권은 개념적으로 일상생활의 서비스 및 재화의 공급이 권역 내에서 완결될 수 있다는 전제에 있으나, 실제로는 생활권 시군이 전국의 중심지체계 또는 도시체계 상에서 상이한 중심성을 지니고 있어 생활권 단위로 완결성을 갖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지자체 간 연계협력을 위해 해당 생활권에는 공식적으로 속하지 않는 중심성 높은 도시와의 관계가 중요하지만, 이들 지역이 동일 생활권으로 구성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63개 생활권으로 경직화되어 있는 기존의 생활권 정책 운영에서 권역 범위를 넘나드는 유연성과 개방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② 자율적 임의계획으로서 생활권 발전계획의 한계

생활권 발전계획은 지역발전계획 수립체계상, 부문별 계획 및 시도발전계획과는 달리 법정 의무계획이 아닌 자율계획으로 제도화되어 있다. 이에 따라 시군의 관심이 낮아 정책추진 3년차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권 발전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생활권이 13개 권역에 달하고 있다. 또한 생활권 발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도 시군의 관심도가 낮아, 연계협력사업의 발굴이 지역에 꼭 필요한 공동발전계획을 수립하기 보다는 지자체 간 이견이 없는 예산지원이 가능한 사업위주로 나열되고 있다.

지역행복생활권 가이드라인 및 지역발전 5개년 계획 수립지침에서는 지역행복생활권 발전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이를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의 시도발전계획에 반영하는 상향식 계획수립 절차를 규정하고 하위계획인 지역행복생활권 발전계획의 주요 내용이 상위계획인 시도발전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연계방안을 마련하였다. (<그림 1> 참조) 지역발전계획 체계상의 연계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하위계획이 먼저 수립되고 난 뒤, 상위계획이 이를 반영하는 체계이어야 하나, 17개 시도 발전계획이 수립된 2014년 12월 이전에 수립된 생활권 발전계획은 12개 권역에 불과하여, 대부분 동시에 진행되거나 심지어는 시도 발전계획 수립이후에 생활권 발전계획이 수립되어 상위계획에 생활권 계획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림1> 지역생활권 발전계획의 수립절차

수립절차	주 체	내 용
생활권 가이드라인 마련	지역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 부처 및 지자체 협력</li> </ul>
↓		
생활권협의회 구성	특별시·광역시장 시장·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권 구성 및 사업 발굴</li> <li>■ 공동 발전목표 및 비전 설정</li> <li>■ 역할, 추진방향, 추진체계 등 정립 (규약 등 제정)</li> </ul>
↓		
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특별시·광역시장 시장·군수 (2인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권 발전계획 수립</li> <li>* 생활권협의회 의결</li> </ul>
↓		
시·도 발전계획 수립	시·도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도 발전계획 수립</li> <li>■ 관할 시·도 내 생활권 계획 반영</li> <li>* 타 시·도에 걸친 경우, 각자 반영</li> <li>■ 필요시 시·도 조정</li> </ul>
↓		
시·도 발전계획 검토	지역위, 관계 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계 부처와 지역위 계획 검토</li> </ul>
↓		
지역발전계획 확정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발전 5개년 계획 확정</li> <li>■ 시·도계획, 부문별 계획(안) 기초로 지역발전계획 수립, 확정</li> </ul>

자료: 지역발전위원회(2015b), 지역생활권 운영실태 분석 및 선도사업 평가지표 개발

### ③ 지역행복생활권의 추진체계 수립 미흡

지역행복생활권 가이드라인 및 지역발전 5개년 계획 수립지침에서는 각 생활권은 생활권협의회를 구성하여 생활권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추진체계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2015년 4월 기준, 63개 생활권 중에서 39개 생활권만이 생활권 협의회체를 구성하였고, 이 가운데에서 행정협의회 형태의 생활권 협의회는 24개이며, 15개는 MOU에 의한 생활권 협의회체로 구성되어 있다. 생활권협의회는 계획 수립단계에서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사업집행단계에서도 연계협력 사업추진을 위한 중요한 추진체계임에도 불구하고, 추진체계의 수립 없이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생활권 협의체를 구성한 지역생활권 현황>

시도	생활권	구성방법	비 고
서울	서경시범생활권	MOU	시범생활권
울산	울산중추생활권	MOU	
경기	평화도시생활권	MOU	
	생명안전도시생활권	MOU	
	경원축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고시
	동북부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고시
	동남부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고시
강원	평안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고시
	춘천중추생활권	MOU	
	치악산중추생활권	MOU	
	동계올림픽생활권	MOU	
	양구인제생활권	MOU	
	영북생활권	MOU	
충북	백두대간생활권	MOU	
	청주중추생활권	MOU	
	충주중추생활권	MOU	
	진천음성괴산생활권	MOU	
	제천단양생활권	MOU	
충남	보은옥천영동권	MOU	
	천안아산중추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고시
	공주부여청양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고시
전북	전북중추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고시
	서남부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고시
	동남부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고시
	동북부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고시
전남	서북부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고시
	중부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고시
	구곡담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고시
	서남부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고시
	동부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고시
	중남부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고시
경북	포항중추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고시
	안동중추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고시
	영주봉화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고시
	상주문경예천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고시
	고령성주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고시
	의성군위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고시
	영덕영양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고시
	소백산권	행정협의회	규약고시

자료 지역발전위원회 내부자료(2015) (자료: 지역발전위원회(2015b)에서 재인용)

#### ④ 생활권 선도사업 위주의 정책 추진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의 이상의 문제점 등으로 인하여, 박근혜 정부의 지역행복생활권 정책 추진은 생활권 선도사업 위주로 추진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생활권 선도사업은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의 확산·촉진을 위해 연계협력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마련한 사업으로서, 생활권을 구성한 자치단체가 주민행복증진에 직결되는 사업에 대해 신청을 하면 사업 당 최대 30억 원의 국고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군의 생활권 담당자들이 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의의를 생활권 선도사업 지원에 두고 있을 정도로, 지역행복생활권 정책 취지에 대한 관심보다는 당장의 예산이 투입되는 선도사업의 선정에 보다 큰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생활권 발전계획은 선도사업 선정을 위한 사전 요건 정도로 인식되며, 생활권 협의회는 생활권 전체를 위해 공동협력사업을 구상해가는 본연의 목적보다는 선도사업의 선정 및 집행을 위한 체계로 축소되어 운영되고 있다.

### 3. 지역 간 연계협력 활성화 방안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이 주민행복증진을 위해 주민의 일상 생활권을 대상으로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한 상생발전 도모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제도적 개선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첫째, 생활권 본연의 개념에 충실한 생활권 구성이 될 수 있도록 생활권은 통근통행 등 통행흐름의 데이터 및 분석에 기초하여 획정될 수 있도록 하되, 생활권 구성원 간의 협력적 의사결정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시군 간 심리적 동질감 및 협력 축적경험에 대한 역사도 고려하도록 한다. 생활권 획정이 경직되지 않고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역 생활권 구성과 계획수립 및 집행을 주도하는데 있어 시군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생활권 발전계획과 상위계획 간의 모순된 지역발전계획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균특법 및 지역생활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현재 지역발전계획과 시도발전계획이 확정되면 그 내용에 적합하게 지역생활권계획을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으나, 생활권 발전계획을 수정할 경우 시도 발전계획을 수정·보완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양 계획 간 연계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는 현재 하위계획 체계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생활권 발전계획의 독자성 및 위상을 강화하여 시도 발전계획과 내용적 차별화를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 생활권 발전계획의 단순한 합이 시도 발전계획이 되지 않도록, 각 계획이 다루어야 할 내용의 범위와 수준을 명확히 구분하여 순차적 계획 수립이 불가능한 현실적 한계를 넘을 수 있는 지역발전계획체제로 정비되어야 한다.

셋째, 지역 간 연계협력 추진체계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생활권협의회 위상을 증대할 필요가 있다. 생활권협의회 운영이 극히 부진한 이유는 예산집행권한 등 실제적 권한이 미흡한데 있으므로, 생활권협의회 법적 위상을 부여하여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생활권 발전계획의 수립 및 집행 주체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균특법상에 생활권협의회 구성과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협의회의 구성 또한 해당 지자체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역 사정에 정통하고 발전전략의 실행에 기여할 수 있는 학계 전문가 등 민간인사의 참여를 제도화하여야 한다. 생활권 사업과 관련한 사업발굴, 예산집행, 사후관리 등 관련 현안에 대한 생활권협의회의 강화된 권한에 의한 운영 노후가 정착·확산될 수 있도록, 모범 사례로 전파될 수 있는 일부 생활권협의회를 선정하여 성공적 운영을 위한 중앙정부의 사전적 예산 지원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이상의 개선책뿐만 아니라 보다 근원적인 해결책으로는 생활권 발전계획의 위상을 재정립하여 법정 임의계획에서 의무계획으로 격상할 수 있게 균특법(제7조의2)의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다.

#### 참/고/문/헌

- 지역발전위원회(2015a), 지역행복생활권 발전계획 효율화 방안
- 지역발전위원회(2015b), 지역생활권 운영실태 분석 및 선도사업 평가지표 개발



한치흠  
지역발전위원회  
지역협력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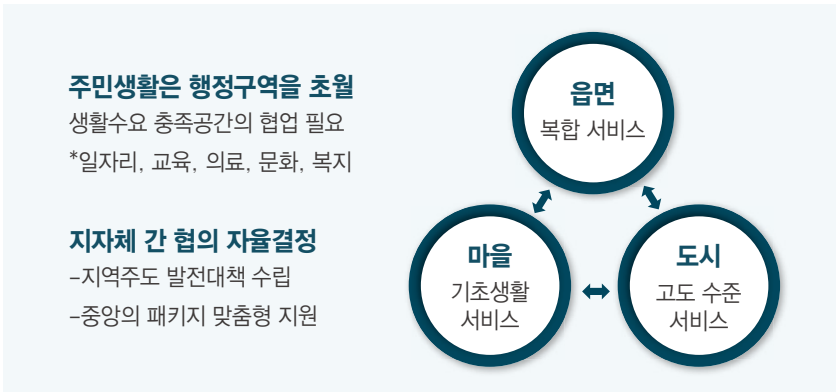
## 지역행복생활권 구현을 위한 지방정부 간 연계협력 강화 방안

### 1. 서론 - 지방정부 간 연계협력과 지역행복생활권

지역발전위원회는 2013년 7월 18일 지역발전정책의 비전으로 “국민에게 행복을 , 지역에 희망을’ 주는 지역희망(HOPE)프로젝트를 제시하였고, 이 프로젝트의 핵심전략으로 주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행복과 희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역행복생활권을 설정하여 추진하였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지역 주민의 행정수요와 생활은 기존 시군구 행정구역을 넘어 생활권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지역행복생활권을 구성한 시군 간에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주민들의 기초인프라, 일자리, 교육문화, 복지서비스를 지역에 관계없이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역행복생활권 전략의 주요 골자이다. 이러한 지역행복생활권 전략 추진을 위해서는 생활권을 구성하는 인접 시군 간의 협력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게 되었다. 지방정부 간의 연계협력은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지만 기초지방자치단체 간의 연계협력이 지역정책의 중심전략으로 제시된 것은 이번 정부가 처음이다.

지역행복생활권 정책 추진을 위해 시군 자율적으로 전국 63개 생활권을 구성하고 생활권별로는 협의기구인 생활권협의체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생활권별로 주민과 전문

가가 참여한 생활권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체감형 과제를 발굴하였고, 지역발전위원회는 선도사업(연계협력 공모사업), 생활권 과제 등을 통해 연계협력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 간 연계협력 사업 추진 방향>

## 2. 지방정부 간 연계협력 개념과 장점

지방정부 간 연계협력의 개념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지방정부 간 연계협력은 아래와 같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주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도 하다.

<지방정부 간 연계 협력의 장점>

삶의 질 향상	생활권 내 지역자원 활용한 주민 이슈 해소로 삶의 질 향상
지식의 공유	타 지자체의 발전 경험과 자산에서 이익 공유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광역서비스 제공으로 서비스 제공 효율성 향상
광역행정체계 구축	경제사회 발전 이슈의 광역화에 대응
지역성장 계획 수립	인구규모 및 경제 상황 변화에 대응하여 인프라 구축 및 관련 서비스 계획 수립
지속가능한 계획 수립	광역적 토지 활용계획으로 민간투자 환경 향상
위기관리	재정분담으로 지자체 재정여건 향상

\* MCDP, 2010, A Guide to Municipal Cooperation : Succeeding in Regional Partnerships, 8-9.



지방정부는 서로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공동 활용함으로써 재정을 절감하고 더 효율적인 서비스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협력에 대한 논의가 앞으로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한편, 지방정부 간 협력이 중요한 또 하나의 배경은 인구구조의 변화에 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고령사회와 사회자본연구센터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2030년에 226개 지자체 중 55세 이상의 장년인구가 전체인구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곳이 89곳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는데 이는 39.4%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이는 지방정부의 서비스 공급 전략이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지방정부 간 연계협력 강화가 하나의 대안으로 기능할 것이다.

### 3. 미국, 일본의 지방정부 간 연계협력 추진 동향

미국은 지방정부 간 연계협력에 대해 100년 이상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먼저, 1962년 이후의 미국의 지방정부 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시 정부와 특별구(Special District)가 증가하였는데 특히 특별구(Special District)는 50년 동안 무려 두 배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특별구(Special District) 증가의 이유는 지방정부의 경계를 넘어선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에 맞추어 특별구(Special District) 이외에도 미국 지방정부 수준에서 각종 협력 방안이 모색되었고, 각기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이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 정부 수 변화>

정부형태	1962년	2012년	증감
총계	91,237	90,107	-1,130
미국 정부	1	1	0
주 정부	50	50	0
지방정부	91,186	90,056	-1,130
카운티(County)	3,043	3,031	-12
시정부(municipal)	18,000	19,519	1,519
타운(Town, Township)	17,142	16,360	-782
학교구	34,678	12,880	-21,798
특별구 (Special District)	18,323	38,266	19,943

\* US Census Bureau 2012 & 2013.



역연구(환경, 경제 등), 쓰레기 처리, 공원, 산림관리, 동물원, 컨벤션센터, 미술관 관리 등으로 업무 영역을 확장하여 왔고, 미국에서 유일하게 주민 직선으로 의장을 선출하는 지방정부로 발전하였다. Oregon Metro는 25개 시정부가 참여하고 있으며 약 150만 명의 관할 인구가 있으며 시설관리 수입과 채권 수입 또한 재산세의 일부를 배분받아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일본은 시정촌이 주체가 되어 중심시의 도시기능과 주변 시정촌의 농림수산, 자연환경, 역사 문화 등 각각의 매력적인 자원을 활용하고, NPO 등 민간과의 상호역할 분담을 통해 권역 전체에 필요한 생활기능을 확보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시키는 정주자립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주자립권을 도입한 주요한 이유는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지역경제의 침체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다. 2014년 기준으로 97개 지자체가 중심시를 선언하였고 82개 권역을 설정하여 386개 시정촌이 포함되어 있는 실정이다. 정주자립권의 연계협력 분야는 아래와 같고, 이러한 분야에 대해 총무성을 비롯한 관계 성청에서는 재정 및 관련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정주자립권의 연계협력 분야>

정책분야	주요내용	
생활기능 강화	의료	의사파견, 휴일 야간진료소 운영
	복지	고령자 복지, 육아, 장애인 지원
	교육 문화	도서관 네트워크, 공공시설 상호 이용
	산업진흥	광역 관광루트 설정, 기업유치
	환경	바이오매스 활용, 저탄소사회 촉진
네트워크 강화	지역교통	지역공공교통 네트워크화
	ICT 인프라 활용	권역 내 정보 공유
	교통인프라 정비	생활도로 정비
	지산지소	학교 급식 지역특산물 활용, 직판소 정비
	교류 이주	공동 빈집뱅크, 권역 내 이벤트 공유
매니지먼트 능력 강화	인사교류	직원 인사교류
	외부전문가 활용	의료, 관광, ICT 전문가 활용

\* 차미숙 외, 2014, 지역행복생활권 실현을 위한 지역 간 연계협력 활성화 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p 35.

## 4. 지방정부 간 연계협력 사업 추진 경과

지역발전위원회는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선도사업(연계협력 공모사업), 생활권 과제를 추진하고 지방정부 자체 협력사업 발굴을 지원하여 왔다. 먼저, 지난 2013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총 139건의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국비 지원)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지역 간 연계협력을 통해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자원을 공동 활용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지역발전위원회가 연계협력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사업분야는 5대 중점분야에 집중하고 있는데 NIMBY 해소, 교육, 주민안전 및 의료 질 개선, 일자리 창출, 생활인프라가 해당된다. 지역별 우수 사업을 살펴보면 빛고을중추도시권(광주, 나주, 장성, 담양, 화순, 함평)의 취약지 응급 협진시스템 구축사업, 전북 서남부권(정읍, 부안, 고창)의 동상동몽 행복만들기 사업, 대구, 경산, 영주, 영양의 약용작물산업명품화 지원 사업, 청주, 증평의 세종대왕 힐링로드 100리길 조성사업 등이다. 빛고을중추도시권의 취약지 응급 협진시스템 구축사업은 거점병원인 전남대 병원을 중심으로 의료 취약지역의 병원과 실시간 의료자문 및 협진을 실시함으로써 의료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환자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전북 서남부권의 동상동몽 행복만들기 사업은 3개 시군 접경지역에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과 농기계 공동활용센터 및 베리류의 6차 산업화를 공동으로 실시하여 3개 시군의 공동 성장과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게 된다. 이와 같이 지역발전위원회 선도사업을 통해 자원의 공동활용을 통해 생활권 내 주민 삶의 질을 높여 나가고 지역 간 공동의 이익을 창출해 나가고 있다. 다음으로 각 부처의 재정지원 사업 중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연계협력 사업을 생활권 과제로 선정하여 해당 부처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의 사례로는 광역 상수도 공급, 문화관광루트 사업, 통합버스정보시스템 구축 등이다. 마지막으로 각 생활권 별로 지방비 또는 비예산사업으로 지역 간 연계협력을 시행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천안아산 중추생활권은 상하반기 각 1회씩 행정협의회를 개최하여 연계협력 사업을 발굴해나가고 있으며, 시립도서관 공동 활용, 문화관람시설 사용료 할인, 일자리 박람회 공동개최, 경계지역 공원관리 일원화 등을 자체 사업으로 발굴하여 시행하고 있다.

## 5. 지방정부 간 연계협력 강화방안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도래라는 외부 환경 변화와 지방재정 절감과 효율화 필요성이 커져 가고 있는 행정 내부 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지방정부 간 연계협력의 필요성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나갈 것이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지방자치가 성숙한 주요 선진국에서는 지방정부 간 연계협력이 이미 뿌리를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의 경우에도 지방정부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여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지방정부 간 연계협력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지방정부 수준에서 연계협력의 필요성과 장점에 대한 인식 제고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지방정부는 상호간의 협의를 통한 합의과정에 이르는 절차적 어려움과 장시간 소요 등으로 해당 지방정부의 단독 사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주민의 관점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반드시 연계협력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인접 시군의 자원을 공동 활용하지 않고는 지역 주민에게 충분한 행정서비스 공급이 어렵다는 현실을 분명히 깨달아야만 한다. 둘째, 지방정부 간 연계협력 의무화 분야를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MPO(Metropolitan Planning Organization)가 설립된 계기는 연방정부에서 MPO를 지방정부가 설치하고 광역 교통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만 연방정부 재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법제화한 것이다. 즉, 연방정부의 교통 관련 재정지원 선결 조건이 MPO 설치와 계획 수립으로 제시됨으로서 전국적으로 MPO가 확산된 것이다. 우리의 경우에도 교통, 쓰레기 처리, 환경 등과 같이 지방정부 경계 차원을 넘어 공동계획 수립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정부 간 협력계획이 수립된 경우 국비 지원을 함으로서 지방정부 간 연계협력을 의무화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셋째, 지방정부 간 협력기구 운영에 대한 지원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 지방자치법상 조합, 행정협의회 등을 지방에서 운영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한 재정지원 방안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SCAG(Southern California Association Governments) 재정현황을 보면 연방정부(68%), 주정부(6%), 지역계획보조금(20%), 지방부담금(6%)으로 운영되고 있어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이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방정부 간 연계협력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식 제고 및 제도적인 지원 이외에 지방정부 자율적으로 해

당 지역에서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독자적으로 공급하기 어려운 서비스를 지방정부 간 협력방식을 통해 수행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지금까지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지방정부 간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중앙과 지방정부 차원에서 추진해 왔으며, 위에서 제시한 제안과 같이 지방정부 차원에서 연계협력 필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과 자발적인 노력이 더해질 때 의도한 성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이원중 외 13인 2015, '지역발전정책론 -이론과 실제-', 율곡출판사.
- 차미숙, 이원섭, 김창현, 임은선, 이미영, 박재희, 2014, 지역행복생활권 실현을 위한 지역 간 연계협력 활성화 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 MCDP, 2010, A Guide to Municipal Cooperation : Succeeding in Regional Partnerships
- Orla O'Donnell 2012, Strategic collaboration local government, IPA.



김상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발전연구실  
수석연구원

## BY2C 외씨버선길 조성사업

지역 공동의 문제해결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연계 협력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외씨버선길 조성사업을 둘러싼 봉화, 영양, 청송, 영월의 4개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지자체 간 연계 협력을 통한 지역개발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얼핏 “BY2C”라는 이름을 들으면 한때 광고에서 쉽게 볼 수 있었던 한 속옷 브랜드를 떠올릴 사람도 있을 듯하다. 예전부터 사람들은 봉화군, 영양군, 청송군의 영어 이니셜 앞글자를 따서 BYC지역이라고 불렀는데, 이 세 지역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낙후지역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 한때 제주도 올레길 등의 트레킹 문화가 여가·건강을 동시에 누리하고자 하는 도시민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전국 각지에 등산 및 산책로를 조성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왔다. 외부인구 유입이 거의 없어 오지라 불렸던 이 세 지역에 산책로를 만들고 풍부한 자연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을 활성화하면 어떨까 하는 구상이 생겨난 것은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3개 군 지역에 강원도 영월군이 참여하면서

‘BY2C 외씨버선길’ 조성사업이 시작된 것이다. 외씨버선길이란 이 네 지역을 연결한 길 이 조지훈이 쓴 ‘승무’의 한 구절인 “소매는 길어서 하늘은 넓고/ 돌아설 듯 날아가며 사 뽀히 접어올린 외씨버선이어”에서 나온 외씨버선과 닮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2009년 8월 지역발전위원회에 BYC 녹색성장포럼 제안서가 제출되면서 지역발전을 위한 세 지역 간 협력을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었고, 그해 12월 BYC 녹색성장포럼과 영양군이 MOU를 체결하면서 본격적인 BY2C 4개 지역의 구도가 만들어졌다. 이듬 해 BY2C 연계협력사업단이 구성되고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 발굴이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으며, 그중 외씨버선길 사업은 2010년 지역발전위원회의 연계·협력사업으로 선정되면서 3년간의 예산지원을 받아, 2012년 8월에 외씨버선길 13개 구간과 연결구간 2개를 포함하여 총 240km가 연결되었다.

외씨버선길 사업은 크게 4가지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는 외씨버선길, 즉 4개 지역을 잇는 산책로를 조성하는 것으로 이는 지역자원 발굴을 위한 지역주민과 각 지자체의 공동탐사를 바탕으로 외씨버선길 개발 및 환경정비를 통해 이루어졌다. 특히 이들 4개 군의 지역자원을 기반으로 스토리텔링을 발굴함으로써(치유의길, 김삿갓 문학길, 슬로시티길 등등, 그림1 참조) 외씨버선길을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다양한 체험루트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주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주민참여 기반 강화는 외씨버선길 사업에



외씨버선길 13길

자료: 외씨버선길 홈페이지([http://www.beosun.com/pages/s2\\_intro.html](http://www.beosun.com/pages/s2_intro.html))



서 또 하나의 중요한 꼭지였다. 각 지역별 참여주민을 선정하고 관련 제반사항 준비 및 주민 교육 등 주민이 참여하는 길 조성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외씨버선길을 지키고 발전시킬 4개 군 지역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즉 외씨버선길을 찾아오는 다양한 방문객에게 외씨버선길을 홍보하고 해설 할 수 있는 지역 주민들의 역량을 길러주고자 하였는데, 지역주민들의 삶이 녹아있는 외씨버선길 이야기는 관광객들에게 친근하고 푸근하게 다가갈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외씨버선길의 다양한 루트를 경험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추가적인 관광수요를 창출하는 등의 효과를 가져왔다.



외씨버선길 13길

자료: 외씨버선길 홈페이지([http://www.beosun.com/pages/s2\\_intro.html](http://www.beosun.com/pages/s2_intro.html))

또한 외씨버선길을 알리고 홍보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이 마련되었는데, 외씨버선길 BI 및 캐릭터 등을 응용한 관광기념품을 개발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직접적인 주민 소득을 창출하고자 하였다. 예를 들면 외씨버선길 여행자수첩 및 스탬프투어 시스템은 외씨버선길 13길에 ‘재미’라는 요소를 개입시켜 스토리텔링으로 발굴된 다양한 루트를 각각 돌아보게 하도록 연계함으로써 관광객이 다시 찾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외씨버선길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루트를 안내하고, 라디오광고 등을 실시함으로써 외씨버선길을 알리고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였다.<sup>1)</sup> 마지막으로 4개 군의 연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권역 내외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상호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1) “오지에 있는 외씨버선길을 누가 걸으러 오는가?” 하는 고민 끝에 개그맨 전유성씨의 목소리를 빌어 광고를 제작하고 이를 MBC 라디오 프로그램에 4년째 내보내고 있다. 이 라디오 광고효과는 4년째지만 광고가 끝나면 꼭 문의전화가 많이 온다는 것에서 확인된다고 한다. (권오상, 2014)

등 전통적인 단일 행정단위 중심 지역개발 패러다임에서 탈피한 지자체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에 중점을 두고자 하였다.

이러한 외씨버선길 조성 사업은 눈에 띄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당초 83%가 산악지형이었던 4개 군 지역에서 가장 큰 고민거리는 접근성의 취약 문제였는데, 외씨버선길 사업은 개발이 덜 된 지역자원을 관광객들의 욕구를 반영한 도보관광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지역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었다. 도보관광객의 체류 증가는 음식, 숙박, 특산품에 대한 판매증가로 이어졌는데, 사업추진 3년간(2010-2013) 1,229명에 이르는 지역주민의 고용창출, 70만 명에 이르는 관광객 수의 증대, 28,009백만 원에 이르는 관광객 지출은 지역 주민의 고용증대 및 소득증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경북북부연구원, 2013).

외씨버선길 조성이 완료된 이후 외씨버선길을 기반으로 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꾀할 목적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추가적인 연계사업으로 기획되었고, 지역발전위원회에 제안·선정되어 예산지원을 받았다. 이 기간 동안 외씨버선길의 유지·관리뿐만 아니라 홍보마케팅, 추진체계의 구성 및 운영, 그리고 협동조합 설립 운영 등을 통해 외씨버선길을 둘러싼 4개 군의 지역 주민 자립 역량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세부사업	주요사업내용
외씨버선길 유지관리를 통한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 외씨버선길 지역주민을 통한 외씨버선길 풀베기 및 유지관리 · 풀베기를 통한 일자리 창출(직접고용): 319명 · 사업단 직접고용: 6명
길 유지관리 및 객주 운영	· 길유지관리및객주(안내센터) 운영
외씨버선길 관광열차 운영	· 오지에 입지한 지역의 접근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외씨버선길 관광열차 운영 (관광열차 운행 8회)
외씨버선길 팸투어 운영	· 팸투어 유치를 통한 언론매체 홍보 실시(한겨레신문) · 사회소외계층이 함께하는 사회화합 차원의 팸투어 진행(참석인원 120명)
소셜미디어 콘텐츠제작	· 상대적으로 취약한 20-30대 청년층 유치를 위해 소셜미디어 콘텐츠 제작 · 외씨버선길 문화조사 및 콘텐츠 제작 · 외씨버선길 12코스별 4분야, 분야별 3쪽지 콘텐츠 발굴 · 스틸컷및발굴조사, 현황보고서작성및콘텐츠제작
외씨버선길 라디오광고	· 외씨버선길 라디오 광고를 통한 마케팅 활동 · 외씨버선길 라디오 광고기획 및 제작

외씨버선길 협동조합 교육	· 외씨버선길 사업참여 담당공무원, 사업시행자, 참여주민대상 역량강화사업 지역별 참여주민 선정: 120명 · 외씨버선길 협동조합 및 관련제반사항 준비, 교육
외씨버선길 주민역량강화교육	· 4개 군의 농업관광 교육 및 트레일산업 참여 활성화 · 외씨버선길 지역공동체와 협동조합 인식 강화

외씨버선길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2014-2016) 자료: 봉화군외(2013)

그렇다면 이 4개 군 연계 협력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던 그 배경 및 요인은 무엇일까? 그 요인으로는 크게 단체장의 협력 의지, 주관기구의 사업 기획력과 일관성, 그리고 적절한 사업추진체계 운영과 명료한 역할 분담을 들 수 있다(차미숙외, 2014). 이 4개 군 지역은 2009년부터 지자체당 2천만 원을 지원하여 BY2C 녹색포럼을 운영하였는데, 이 포럼에서 지역 간 협력을 통한 동반 성장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이는 외씨버선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던 원초적인 배경이 되었다. 또한 2010-2013년간 수행된 외씨버선길 조성사업에 그치지 않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구상하고 이를 통해 외씨버선길의 유지·관리뿐만 아니라 협동조합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 주관기구(경북북부연구원)의 기획력과 일관성도 4개 군에 이르는 연계·협력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던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업 추진 목적에 따라 추진체계를 구성·운영하고 각 지자체의 역할분담을 명료화하여 집행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규정(BY2C연계협력사업단 운영규정, 2010.6.23)을 마련한 것도 이 지역 연계협력 사업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었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빼놓을 수 없는 성공요인이다. 외씨버선길을 처음 조성할 때부터 과거에 지역주민들이 장보러 다니거나 학교 다니던 길을 복원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직접 길을 물어보고, 길 조성에 있어서도 100% 주민들이 참여함으로써 주민들의 외씨버선길에 대한 관심과 자부심이 매우 높다. 또한 길 조성 이후 풀베기, 외씨버선길 유지보수 등을 전적으로 주민에게 맡김으로써 70세 이상 농촌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외씨버선길 조성사업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낙후지역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었던 봉

화, 영양, 청송 영월 지역이 지역의 다양한 자연자원 및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사업화하고, 특히 4개 군의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협력을 통해 그 사업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성공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특히 단순한 산책로 조성에 머물지 않고, 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농민들의 소득증대 및 일자리창출로 연결시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지역자원의 창조적인 활용, 체계적인 사업추진체계의 구성, 그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크고 작은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장치, 그리고 무엇보다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다양한 전략 마련 등은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개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참/고/문/헌**

- 권오상(2014), "외씨버선길, 지역의 보물이다", 「지역과 발전」, 14.
- 경북북부연구원(2013), BY2C 외씨버선길 백서.
- 봉화군외(2013), 외씨버선길BY2C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사업 1차년도 사업성과보고서.
- 지역발전위원회 보도자료(2014.11.5.)
- 지역발전위원회·농림수산식품부(2013),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사업 편람.
- 차미숙외(2014), 지역행복권 실현을 위한 지역 간 연계협력 활성화 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 외씨버선길 홈페이지: <http://www.beosun.com/index.html>

구름도 쉬어가는  
아시아의 알프스,  
HAPPY700 평창



대산의 정기와 대관령의 드넓은 푸른 초원, 사계절 화려한 옷으로 갈아입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두루 간직한 평창은 맑은 물과 높고 푸른 산, 잘 보존된 자연환경이 어느 곳보다 아름다운 고장이다.

봄이면 온갖 야생화가, 여름엔 푸른 산림과 맑고 시원한 강과 계곡, 가을이며 붉게 타오르는 오색단풍, 겨울엔 하얀 설경과 스키장, 눈 덮인 목장 풍경이 눈부시게 아름다운 곳이다. 사람이 살기에 가장 이상적인 고도인 해발 700m에 위치해 있는 HAPPY700 평창은 자연이 주는 즐거움과 함께 '아시아의 알프스'로 불리며, 가산 이효석 선생의 문학적 향기와 대관령의 이국적인 풍광이 조화를 이룬 축복받은 우리 마음의 고향이다.

## ◇ 동강과 백룡동굴이 어우러지는 “마하생태관광지”



마하생태관광지는 한때 댐건설 계획으로 수장될 위기에 처했던 곳으로 평창군 미탄면 마하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강과 백룡동굴이 어우러지는 자연 경관이 일품이다. 천연기념물 제 260호로 지정된 백룡동굴은 5억년의 신비로움을 간직하고 있어 학술적 가치가 높은 동굴이다. 2010년 7월 개장하여 하루 180명만 입장하

는 생태체험학습형 동굴로 개방되어 동굴탐방 복장을 착용하고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실제 동굴을 탐험할 수 있다.

백룡동굴 가는 길목에 위치한 평창동강 민물고기생태관은 2009년에 개장하여 동강에서 서식하는 민물고기 45종을 전시하고 있으며 민물고기에 대한 학습이 가능하다.

문희마을에서 출발하는 백운산은 한국 100대 명산중 하나로서 백운산 정상에 오르면 굽이쳐 흐르는 동강의 장관을 조망할 수 있으며, 등산로는 동강유역의 우수한 생태환경을 그대로 만끽하며 산세를 감상할 수 있다.

칠죽령 트래킹코스는 백룡동굴관리사무소에서 약 1.6km에 정상에 전망대가 위치하며, 코스가 완만하여 성인이 1시간 30분이면 왕복할 수 있는 코스로 전망대에서 내려다보이는 굽이치는 동강의 모습은 단연 일품이며 최근에는 아름다운 숲길로 선정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다.



동강



### ◇ 소설 메밀꽃 필 무렵의 배경지 “효석문화마을”

장돌뱅이들의 고단하면서도 낭만적인 삶을 유려한 필체로 그려낸 소설 ‘메밀꽃 필 무렵’의 저자 가산 이효석 선생의 숨결이 살아있는 봉평 효석문화마을은 추억과 낭만이 살아있는 아름다운 마을이다. 소설의 내용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듯한 가산공원 내에는 장돌뱅이들이 자주 들렀던 충주집이 있고 흥정천 다리 건너에서는 허생원과 성씨 처녀가 사랑을 나누었던 물레방앗간을 볼 수 있다. 메밀밭길을 따라가다 보면 가산 이효석 선생의 생가터와 이효석박물관이 나온다. 특히, 가을이면 마치 소금을 뿌려놓은 듯 메밀꽃이 지천으로 피어 더 아름답다. 해마다 9월이면 효석문화제가 열려 토속적이고 서정적인 가산 문학의 정취를 느껴보는 문학, 문화, 체험행사가 열린다.



### ◇ 천년의 느낌을 배운다 “오대산 천년 숲길”

불교의 성지 오대산에 들어서기 전 일주문에서 금강연에 이르는 약 800m구간에 조성된 천년 숲길은 500년 이상 된 아름드리 전나무가 뽕뽕이 들어서 있어 국내에서 가장 아름다운 숲길 중 하나로 꼽힌다. 흙으로 조성되어 있어 맨발 걷기가 가능하고 각각의

나무와 꽃들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되어 있어 아이들 학습에도 좋다. 숲에서 주는 맑은 공기는 이내 머리를 시원하게 만들어 준다.

천년 숲길이 끝나는 곳에서부터는 월정사에서 상원사까지 오대산 옛길을 따라 계속하여 숲길 걷기가 가능하다. 나무 사이로 난 폭신한 오솔길은 때로는 돌다리와 쇠다리를 지나기도 하는데 계곡의 물소리를 들으면서 걸을 수 있어 최고의 트래킹 코스로 추천할 만하다.



천년 숲길



## ◇ 목가적인 풍경을 지닌 “대관령의 목장들”

해발 850~1470m 대관령의 고원지대에 위치한 대관령의 목장들은 동양 최대 규모의 목장인 ‘에코그린캠퍼스’(구.삼양목장), 40년 만에 관광객을 위해 올해 처음 개방한 ‘대관령하늘목장’, 약 62,000여 평의 푸른 초지에 양 체험을 할 수 있는 ‘대관령양떼목장’ 등 낙농업과 관광업이 융합된 관광농업형 관광지가 발달한 곳으로 유명하다. 특히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바뀔 때마다 와 닿는 느낌은 마치 유럽의 알프스로 착각할 정도로 매우 아름답다.



에코그린캠퍼스



대관령 양떼목장



## ◇ 은빛 대자연을 질주하는 짜릿한 쾌감 “스키·스노보드 즐기기”

겨울이 길고 추우며 국내에서 강설량이 가장 많은 곳으로 평창의 리조트들은 뛰어난 설질과 우수하고 다양하며 편리한 첨단시설을 갖추고 있어 스키어와 스노보더들이 첫 손가락에 꼽는다.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도시로 접근성이 더욱 좋아지고 숙박 및 편의시설까지 잘 갖추어져 있어 겨울 레포츠를 즐기는 이들에게는 최적의 장소이다.

매년 1월이면 대관령에선 눈꽃축제가 열린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최된 한국 고유의 전통 겨울 축제이자 지역민들이 최초로 개최하고 발전시킨 주민 축제로 눈마을이 아니면 볼 수 없는 독특한 겨울 생활 이벤트를 연출하는 생활문화축제이며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는 체험축제이기도 하다.



리조트



스키점프



대관령 눈꽃축제-알몸마라톤



대관령 눈꽃축제



대관령 눈꽃축제

## ◇ 평창 송어축제(12~1월)



눈과 얼음, 송어와 함께하는 겨울이야기란 주제로 매년 1월에 우리나라 최초이자 최대의 송어양식지 평창에서 생산되는 겨울송어의 짜릿한 손맛과 참맛을 볼 수 있는 축제이다. 평창송어축제는 눈으로 바라보는 축제가 아니라 직접 참여하고 부딪히며 몸으로 느끼는 겨울

송어축제 체험축제이다. 송어낚시는 물

론이고 송어회의 쫄깃한 맛을 느낄 수 있으며 겨울스포츠까지 즐길 수 있다. 체험행사로 얼음낚시, 맨손송어잡기, 전통썰매, 4륜 ATV 등을 체험할 수 있으며 눈썰매, 눈사람 및 얼음터널 등을 즐길 수 있다.



박진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발전연구실  
수석연구원

## 마을 속 골목경제 활성화사업 추진방안

### 1. 들어가기

- 우리나라 경제는 80년대 중반까지 높은 성장률을 보이며 고도성장을 해왔으나, 이후 주춤하다 IMF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본격적인 저성장시대로 돌입
  - 정부의 지역진흥 및 서민경제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지역 소상공인 등 주민이 체감하는 경기는 갈수록 악화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하에서 중소기업청 등이 추진 중인 현 서민경제 지원정책은 전통시장 지원에만 집중되어 있어 제도적 사각지대 발생
  - 전통시장 지원정책은 주차장, 아케이드 등 기반시설을 조성·확충하는 단편적인 대책이 대부분
  - 서민경제 또는 지역경제 전반의 새로운 트렌드에 대한 체계적 지원은 미흡하며, 지속적인 발전 유도에도 한계
- 장기적 경기침체로 붕괴되어 가고 있는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존의 제도적 체

계상으로는 지원받고 있지 못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 골목상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지원 필요

- 상인과 주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상권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일상생활의 애로사항 해소

○ 골목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주요정책 및 사례분석을 통하여 골목경제 활성화 및 골목상권의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방향 및 방안을 모색하도록 함

- 지역의 골목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지역주민과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마을단위에서의 서민경제 활력 도모

## 2. 골목경제 개념정립 및 관련정책

### 1) 골목경제 개념과 의의

#### ■ 골목과 골목경제의 의미

○ ‘골목’은 큰 길에서 들어가 동네 안을 이리 저리 통하는 좁은 길을 말함

- 골목은 골(고을, 마을, 동네) + 목(좁은 통로)의 합성어로 추정되며 마을 속의 길목들이 이어지고 갈라지고 합쳐지는 그 흐름의 전체를 묘사하는 용어임

○ ‘골목경제’는 학문적 용어는 아니며, 일정한 지역사회의 공간(마을, 동네 등)에서 이루어지는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교환, 분배 및 소비와 관련된 모든 인간 활동을 가리킴

- 마을 단위의 소권역에서 이루어지는 지역경제를 상징적으로 일컫는 용어임

○ 행정자치부에서는 골목경제를 골목경제 협의체 주도로 골목이 지닌 유무형의 경제적 가치를 제고하여 지역의 소득증대 및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 효과를 지역에 환원하는 골목단위 경제라 정의하고 있음

- 골목경제협의체는 주민, 상인, 이해관계자(법인, 조합,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활동가) 등 지역의 사회경제적 생활을 공유하며 공통의 가치와 유사한 정체성을 가진 경제 협의체를 말함

### ■ 골목경제의 의의

- 골목경제의 주체는 주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및 이들의 연대화된 집단인 경제공동체로 지역 내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함
- 골목경제에서는 주민이 곧 생산자, 판매자이면서 동시에 이용자, 소비자를 겸하는 경우가 많아 고용, 자본, 물자의 역내 순환이 용이하고, 지역 내 경제의 선순환을 추구함
- 함께 모듬살이를 하는 구성원이 골목경제를 활성화하고 상가거리를 재생함으로써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개성 있는 지역사회를 건설하여 지역사회의 공동체 가치를 새롭게 복원할 수 있음
  - 마을 단위의 경제공동체를 육성함으로써 골목을 마을 커뮤니케이션의 거점이자정이 넘치는 생활의 장(場)으로 조성

## 2) 골목경제 관련정책

### ■ 중소기업청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과 소상공인 지원사업

- 중소기업청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하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전통시장 활성화지원사업은 시설현대화사업, 경영현대화사업, 특성화시장육성사업, 조세감면 등을 지원
  - 특성화시장은 문화관광형시장, 골목형시장, 글로벌 명품시장으로 구분
  -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여 주말시장 지원, 임시시장 개설, 농어민직영매장설치 지원, 빈 점포 활용 촉진, 주차요금 감면 등의 사업을 함께 추진
- 또한 중소기업청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하에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추진
  - 소상공인, 즉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안정적 성장, 재도전으로 단계를 구분하여 사업지원
- 전통시장 활성화의 매개로써 ‘문화’와 이를 통해 침체된 전통시장을 지역문화공간이자 일상의 관광지로 재생시키고자 추진했던 문화체육관광부의 ‘문전성시’ 프로젝트 사업은 2015년 중소기업청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통폐합됨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과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사업은 경제기반이 상실되고 근린 생활환경이 악화된 도시 내 쇠퇴지역의 경제·사회·물리적 재생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임
  - 도시재생사업은 목적 및 성격에 따라 도시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형(중심시가지형, 일반형)으로 구분
-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은 지역발전특별회계에 의해 편성된 사업으로 특별·광역시 의 군·구 및 시 지역 중 도농복합형태의 시를 제외한 지역을 대상으로 함
  - 도시활력증진사업은 2010년 도시활력재생사업, 마을활력재생사업, 그리고 기반 시설정보구축사업 등으로 지역단위로 추진되어오다가, 2011년부터 사업의 특성(주요 활성화 대상특성)에 따라 4가지 사업유형으로 구분하여 사업을 지원

■ 행정자치부 골목경제 활성화 시범사업과 마을기업 육성사업

- 지역공동체를 강화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작은 단위의 경제진흥방안으로 행정 자치부는 2015년 골목경제 활성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골목특성과 골목자원을 활용한 지원사업의 다각화, 지역사회의 공동이익 추구 및 주민과 지역상인의 공동사업을 통한 해결모색 지향
  - 사업유형은 역사자원형, 문화예술형, 음식특화형으로 구분되며, 단순 시설사업이 아닌 H/W+S/W가 복합된 종합지원방식을 채택
  - 참여의지, 입지, 상권, 사업계획서, 창의성, 주민활동, 기대효과 등을 평가기준 으로 2015년 공모에서 선정된 지역은 부산 서구의 100년 송도 골목길과 경북 영 주의 학사골목(대학가 주변)임
- 또한 마을기업육성사업은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 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임
  - 마을기업은 기본적으로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문제를 발견해 내고, 이를 기업적인 방법을 통해 해결해 나가는 커뮤니티 비즈니스(community business)적인 성격을 갖고 있음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과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의 차이점>

구분	중소기업청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행정자치부 골목경제 활성화사업
사업대상	주로 등록된 전통시장(시장 내 상점 50개 이상)을 대상(무등록/미인정시장 및 상점가 제외)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50개 미만의 소규모 상점가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골목경제
추진주체	시장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시장상인이 설립한 협동조합과 법인, 시장관리자 등	지역주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마을경제공동체
사업내용	주차장, 진입로, 아케이드 등 시설현대화 사업 마케팅, 교육, 연수 등 경영컨설팅사업	하드웨어/소프트웨어/휴먼웨어 복합지원 상인·지역주민을 포괄하는 마을 속 경제살리기 지향(지역 커뮤니티 기능 강화)

### 3. 골목경제 활성화 심층사례분석

#### 1) 사례분석 개요

- 골목경제에서 주민이 주체가 되어 마을 중심의 관계구도로 지속성을 확보하고 있는 사례를 위주로 사업측면과 주체측면 제도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함
  - 사업(Program)측면은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당 지역의 고유자산 활용 정도, 골목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낸 핵심 가치와 아이디어, 기존의 지역 내 타 사업(정부지원 시책 및 민간차원 사업)과 연계 정도,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측면에서 지역사회 기여 정도를 분석
  - 주체(Actor)측면은 혁신적 리더의 역할과 추진조직, 주민 참여도, 갈등조정 기제 및 지역 내 리더 및 관계자 집단 간 협력 정도를 분석
  - 제도(Institution)측면은 관할 행정구역(읍면동)의 지원 정도와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 지원체계, 그리고 중앙정부의 지원체계를 분석

#### 2) 성공사례분석(서울 양천구 모기동)

##### ■ 대상지역 여건

- 서울에서 인구밀집도가 높은 지역으로 목동에서 신시가지와 구시가지로 나누어져

서울에서 사회 양극화가 심한 자치구이기도 함

- 이 가운데 대상지역인 목2동은 낮은 5층 이하의 빌라촌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아직 까지 도시 속 마을의 감수성이 존재하고 있는 지역

- 2011년 가을 각자 활동하던 지역 주민들이 모여 골목축제를 기획하면서 현수막에 소리 나는 대로 붙인 이름이 ‘모기동 마을축제’였으며, 그 후로 목2동을 ‘모기동’이라 칭함
  - ‘모기동 마을’은 특정 주체에 의해 마을이 형성된 곳이라기보다는 기존의 주민과 기관, 장소들이 함께 만나면서 또 다른 관계와 의미로 확장
- 목2동의 음식점은 염창역 3, 4번 출구 사이에 가장 높은 밀도로 형성되어 있으며, 공 항대로에서 목2동을 가로지르는 목동중앙본로와 목2동 재래시장 주변에 상권이 형성
- 2010년 미술을 전공한 친구들 네 명이 의기투합해 만든 카페 ‘숙영원’이 마을공동 체의 거점 역할을 수행

## ■ 사업(Program) 측면

- 지역자산활용
  - 목2동이 보유한 골목길, 카페, 공방 등 유형자산과 더불어 무형의 인적 및 관계자 산을 활용
- 창의적 아이디어
  - 주민 스스로 자연스럽게 다양한 아이디어를 추진하면서 2011년 모기동 첫 마을축 제인 ‘모기동 궁여지책’ 탄생
  - 지구의 온도는 1도 낮추고, 사람의 온도는 1도 올리자는 문화예술단체, ‘플러스마 이너스 1도씨’의 예술철학은 지역문화 활성화를 도모
  - 베틀 놀이터, 마을 상영회, 그림 전시회, 거리놀이터 등의 축제 프로그램을 준비 하고 공공예술교육, 인문학 강좌, 생활예술교육, 독서 스터디 등이 동시에 진행
- 사업연계성
  -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주민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문화 활동 공간인 ‘모기동 문화발전소’ 운영
  - 마을학교 상생 프로젝트 ‘모기동 마을학교’와 마을미디어 ‘동네잡지’를 추진하여



동네잡지에 골목가게 소개를 통해 골목경제 활성화와 연계

- 전통시장 활성화를 마을 차원에서 고민하고 지속적으로 상인들의 참여를 독려하여 목2동 재래시장 상인들의 참여 기획 및 상권의 활성화 도모
- 수녀원 지하공간을 청소년들의 문화공간으로 개방하여 ‘컬처 카페(Culture Cafe) 청·청·청’ 운영
- 공동체 의식을 지니고 마을 안에서 협력과 나눔을 통한 자립경제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폐백·이바지 음식을 배우는 ‘조물락 나눔 공방’ 운영(부업)

○ 지역사회 기여

-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단순 참여자에서 자발적 주도자로 마을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 자리매김
- 마을축제 개최 등을 통해 인근 상인들과도 협력하여 골목 공동체를 활성화하고자 한 경험이 축적되어 향후 골목상권 활성화에도 기여

모기동 문화발전소(카페 숙영원과 나무도예방)



## ■ 주체(Actor) 측면

### ○ 혁신적 리더의 역할

- 숙영원 카페지기이자 문화매개집단 플러스마이너스 1도씨 공동대표 김지영씨와 류다원씨가 마을활동 프로젝트를 총괄적으로 기획 및 운영

### ○ 추진조직 구성

- 모기동 마을 공동체: 인위적인 조직이 구성되어 마을사업을 추진했다기보다는 숙영원을 중심으로 마을 내 관련 단체들이 자연스럽게 네트워킹을 형성
- 협동조합 '나무와 숲', 마을공방, 청소년센터, 창작공간 등 목2동 마을네트워크와 목2동 주민센터, 양천구청, 골목상인들이 협력하여 활동

### ○ 주민참여도

- 숙영원 카페뿐만 아니라 나무도예방, 나무와 숲, 마리아의 딸 수도회 등 지역단체들이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마을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 ○ 갈등조정기제

- 모기동 마을 공동체의 핵심 리더인 카페 '숙영원'의 김지영·류다원 대표는 목2동에 카페를 차린 외지인이었음
- 카페 숙영원이 마을 주민들에게 다가간 첫 단추는 카페에서 공방을 열어 마을주민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

### ○ 네트워킹

- 민·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기존에 형성된 지역기반 공동체들(단체, 기관, 주민)간의 마을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여 마을 공동체의 다양한 활동들을 추진하는데 있어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

## ■ 제도(Institution) 측면

### ○ 관할 행정구역의 지원

- 우리마을지원사업으로 2015년 현재 양천구 30개 마을을 선정하여 마을사업별 1백만 원씩 지원해주며 목2동에서는 '목2동 꿈꾸는 아이들의 마을놀이터'와 '목2동의 역사와 발전을 담은 자료집 발간' 사업이 선정

-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체계
  - 서울시 문화정책과의 마을예술창작소 공모사업으로 모기동 문화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대 2년간 연 2,0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받음
- 중앙정부의 지원체계
  - 행정자치부의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있으나 목2동에서는 중앙부처의 지원을 받는 마을기업은 현재까지는 없음

■ **종합성과**

- 모기동 마을 공동체의 핵심적 리더 역할을 수행한 문화매개집단 플러스마이너스 1도씨는 지구의 온도를 1도 낮추고, 사람의 온도를 1도 높이는 그들의 이념을 단체의 거점기능을 수행하는 카페 숙영원을 통해 충실히 수행해감
- 플러스마이너스 1도씨의 문화적 신념인 ‘삶은 아트’를 통해 자칫 지역주민과 괴리될 가능성도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원활히 하며 마을에 정착
- 교육의 메카로 알려진 목동의 주변 신도시 아파트 단지의 지역주민들은 모기동 골목상권의 주요 배후지를 형성하며 모기동 발전에 기여

모기동 사례의 성공요인



## 4. 골목경제 활성화사업 추진방안

### 1) 추진방향

#### ■ 주민주도형 사업추진

- 지역주민과 소상공인 등이 모두 체감할 수 있는 사업발굴 및 추진과정에서 관주도가 아닌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창의적인 활성화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

#### ■ 주민체감형 사업추진

- ‘마을 속’에 존재하는 ‘골목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 중 지역주민과 소상공인 등이 모두 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 지역문제해결형 사업추진

-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모멘텀을 창출할 수 있도록 골목경제·지역상권 활성화 및 상권의 문제 해결,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 도모

### 2) 지원방향

#### ■ 제도적 사각지대 해결을 위한 정책지원

- 장기적 경기침체로 붕괴되어 가고 있는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존의 제도적 체계상으로는 지원받고 있지 못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 골목상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지원 필요
  - 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은 무등록·미인정 시장 및 50개 미만 상점가는 정책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쇠퇴도시의 재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도시에 국한된 종합적 정책지원임

#### ■ 시장공동체의 자구책 지원

- 상인들 스스로의 노력으로 체계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사례는 자발적 참여를 통해 다시 찾고 싶은 골목상권 형성에 기여하므로 시장 공동체의 자구책 지원방안 강구
- 현재 상인들의 마을 만들기를 지원하는 시책은 마을 공동체 지원사업이나 도시재생 사업 등의 일부로서 추진되는 사례가 있기는 하나,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을 만들기 지원 시책으로 타겟화된 사례는 2015년 행정자치부의 골목경제 활성화 시범사업에 불과
  - 향후 서민경제인 골목경제를 재활성화시키기 위한 시책으로서 시범사업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시책화할 필요가 있음

### ■ 지역커뮤니티 기능강화

- 골목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해나가기 위해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해당 지역사회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중심장소로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임
  - 골목경제가 지역밀착형 상권으로 기능적인 개조를 이루는 것과 함께 ‘마을 속 경제’ 즉 마을경제라는 인식이 상인과 지역주민들에게 형성되어야만 골목상권이 살아날 수 있음

## 3) 지원시책

### ■ 마을속 시장살리기 지원시책

-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골목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2015년 1차 추진된 시범사업의 지속적 추진 및 공감대 확산
  - 지자체 및 주민의 관심 유도과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우리동네 골목구경 콘테스트 및 지원사업 공모를 이원화하여 추진
-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지역의 지원사업인 만큼 성공사례 창출을 위한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므로 예비지역 상인 공동체간의 교류의 장을 운영하고 추진 매뉴얼 제공
- 지속적인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인 스스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자발적인 움직임, 즉 시장 마을 만들기 활동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므로 마을 속 시장만들기 가치 확산

■ 골목상권 영세상인 지원대책

- 소비자들이 다시 찾고 싶은 골목으로 재활성화하기 위하여 골목경제 창업 상점 (Challenge shop) 운영 지원
- 생계형 소규모 자영업포 및 골목상권 지원
  - 서울 모기동 사례에서 보듯이 민간 전문가의 멘토링 지원시스템이 중요하므로 자영업 경영컨설팅 전문인력을 지원하거나 멘토 점포 지정
- 임대료 상승 등으로 인해 기존에 상권 활성화에 기여했던 임대상인들은 내쫓기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현상으로부터 골목상인을 보호
  - 임대상인을 위한 대안상가 조성, 자율상생협약을 통한 지속가능한 골목경제 운영 지원 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주시 MOU 체결

- 일시 : 2016년 3월 10일 11:00
- 장소 : 원주시청 7층 투자상담실
- 주최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주시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원주시는 2016년 3월10일 목요일 오전 11시 원주시청 투자상담실에서 '원주시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연구원 청사 이전 준비'  
워크숍 개최

- 일시 : 2016년 3월 17일 9:30 ~ 11:00
- 장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5층 세미나실
- 주최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2016년 3월 17일 목요일, 연구원 5층 세미나실에서 '제4차 정책아이디어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날 열린 워크숍에서는 이삼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연구원 청사이전 대비 준비사항'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정책연구과제  
착수보고회 개최

- 일시 : 2016년 3월 15일 ~ 18일
- 장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회의실
- 주최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2016년 3월 15일부터 18일까지 연구원 회의실에서 '제5차~제6차 연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자치행정·지방재정·지역발전 분야 정책연구과제 착수보고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였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합천군 MOU체결

- 일시 : 2016년 3월 22일 11:40
- 장소 : 합천군청 2층 소회의실
- 주최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합천군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합천군은 2016년 3월22일 화요일 오전 11시 40분에 합천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지방행정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원시정연구원  
MOU체결**

- 일시 : 2016년 3월 25일 11:00
- 장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5층 세미나실
- 주최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원시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수원시정연구원은 2016년 3월 25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5층 세미나실에서 ‘지역정책의 발전과 상호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교육연수 [담당자: 전한규 / 02-3488-7386]**

- 4/월/교/육/일/정

과정명	교육기간	교육일정
창조와 소통의 정부3.0	3일(비합숙) (21시간)	제2기 4. 6(수) ~ 4. 8(금)
사업예산과 복식부기회계	3일(비합숙) (21시간)	제3기 4.27(수) ~ 4.29(금)
주민행복 마을만들기	3일(비합숙) (21시간)	제2기 4.20(수) ~ 4.22(금)

# 젊음특권 행복주택

2016년 1만호의 행복주택을 전국 곳곳에서 누려라!



젊음특권 행복주택, 전국 23곳에서 1만호가 공급됩니다!

<p><b>서울지역</b></p> <p>가좌역 / 상계장암 / 마천3 / 기양 / 신내3 / 천왕2</p> <p><b>1,198호</b></p>	<p><b>충청지역</b></p> <p>대전도안 / 충주첨단</p> <p><b>478호</b></p>	<p><b>경기지역</b></p> <p>성남단체 / 고양삼송 / 화성동탄 / 안양관양 / 파주운정 / 의정부민락2 / 의정부호원 / 포천신읍</p> <p><b>4,212호</b></p>	<p><b>호남지역</b></p> <p>광주효천2 / 익산인화</p> <p><b>1,514호</b></p>
<p><b>인천지역</b></p> <p>주안역 / 서창2</p> <p><b>820호</b></p>	<p><b>영남지역</b></p> <p>대구혁신도시 / 대구테크노 / 김해진영</p> <p><b>2,602호</b></p>		



**행복주택이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장이 가까운 곳에 저렴하게 공급하는 새로운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블로그 주소 <http://blog.naver.com/happyhouse2u>)

문의처 1600-1004 (LH 콜센터)



생활을 편리하게 민원24, 편리한 연말정산, 안심상속서비스 등  
정부를 유능하게 고용복지+센터 등 협업조직, 스마트 오피스 등  
창업을 쉽게 데이터활용 청년창업, 워크넷 고용정보시스템 등  
국민에게 믿음을 선제적 정보공개, 열린재정시스템 등

# 국민을 향한 즐거운 변화

## 정부 3.0

국민 생활 맞춤서비스 정부3.0으로 국민 행복을 키워갑니다

공공정보를 적극 공개·개방하고 (투명한 정부)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 소통·협력하여 (유능한 정부)

국민 개개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정부)



행정자치부  
MINISTRY OF THE INTERIOR

03

## 지난호 포럼주제 : 생활자치

---

이/슈/대/답

- 21세기형 최첨단 산업문화도시,  
좋은 도시 편한 진주 : 이창희 진주시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30길 12-6 (서초동)  
TEL. 02-3488-7300 FAX. 02-3488-7309  
<http://www.krila.re.kr>